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49
----------	-------

발의연월일 : 2021. 6. 22.

발 의 자 : 송기현 · 김승원 · 맹성규
박성준 · 백혜련 · 오영환
이성만 · 이원택 · 조용천
최기상 의원 (10인)

제안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사건사고, 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부모, 부양자 등으로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외국인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국내에 사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관광이나 방문 등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신분변동 관리에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외국인 사망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8

조제2항 개정).

나. 부동산거래, 임대차계약, 경매 등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나 시설의 소재지를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 신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시에도 해당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8조의3 신설).

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비대면 금융계좌 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개별법에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은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위확인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4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 중 “대한 정보”를 “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처분 정보”를 “행정처분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을 “외국인 사망자 정보,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옥체험업소의 현황”을 “한옥 체험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로 한다.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거소)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 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

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교부 신청절차,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등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 등의 진위확인)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에게 발급된 신분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등록증 등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략)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1. 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포함한다):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u>대한 정보</u>	1. ----- ----- ----- ----- ----- ----- ----- ----- -- <u>대한 정보, 외국인 사망자 정보</u>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u>행정</u>	2. ----- ----- ----- ----- ----- ----- ----- ----- ----- ----- <u>행정</u>			

처분 정보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과태료 납부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채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

4. 출입국사범 조사: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관세사범정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

[illegible]

정보, 납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숙박업소 현황, 관광숙박업소의 현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현황, 한옥체험업소의 현황

5.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 한옥체험
업소의 현황, 외국인 사망자
정보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거소)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

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신 설>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
항, 열람·교부 신청절차, 수수
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
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주민등록
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 소재지를 체류
지나 거소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등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 등의 진
위확인) ① 법무부장관은 「출
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에게 발급
된 신분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
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
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등록증 등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